

## “경제가 안보”... 반갑다 한미동맹, 가자 글로벌로

尹 “경제가 안보... 반도체·원자력·우주개발 등 실질적 협력”  
IPEF 가입, 인·태지역 질서 구축... 핵심기술 수출통제 강화키로  
“공급망·첨단기술 등 수시소통... 신형원자로 개발·수출 협력”  
바이든 “한미동맹, 지역평화·번영 핵심축... 한일관계 개선 논의”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면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바로 세계 최대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팹리케이션을 방문, 윤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첨단 설비를 둘러봤다.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구상하는 IPEF와 관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양국은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했다.

IPEF가 사실상 ‘반중국 연대’의 성격을 띠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정상은 이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첨단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와 수출통제의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인 질서 있는 외환시장, 신형 원자로·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수출 증진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

문에 “윤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다.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 기준금리 1.5%→1.75% 인상

15년 만에 2달 연속 인상  
5% 넘보는 고물가 대응책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기존 1.50%에서 1.75%로 올라섰다. 4%를 넘는 고물가 속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날 회의는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은은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금통위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이날 금통위 역시 임지원 전 금통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7인 체제가 아닌, 6인 체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한은의 이날 금리 인상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달 만에 추가 인상이 결정된 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무엇보다

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8%까지 오르며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한은의 목표 물가치인 2%의 두 배가 넘는다.

물가 안정을 제 1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인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도 상당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3%에 달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추가 빅스텝(0.50%p 인상)을 감안하면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이 무리가 아니다. 이날 공개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부분은 다음 두어번 회의서 0.5%p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 초 연준이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는 0.5%p로 좁혀졌다. 미국의 연속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앞지른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수순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biz.co.kr

## “선거 앞두고 릴레이 감세”... 정상화인가 돈풀리증인가

종부세·법인세·상증세 등 줄줄이 감세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배제는 이미 시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줄줄이 감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감세 포퓰리즘이나 비정상적이었던 세제의 정상화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종부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이 크게 높아진 종부세에 대한 민심은 지난 3월 대선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좋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세 차례 종부세를 개정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2%년 최고세율을 3.2%로 증과하고 세부담 상환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첫 번째 대책이 나온 지 1년 3개월만인 2019년 12월 16일 3주택 이상 보유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해서 세율을 최대 3.2%, 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0년 7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개인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6%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크

게 늘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1조 7000억원이던 종부세 수가 2021년 6조 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당장 추진하기에는 공론화 과정과 국회 통과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 인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21년에 19.05%로 급등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을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거나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이미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가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 기간일 규정도 폐지되면서 감세 행렬의 시작을 알렸다.

법인세 인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단체나 재계 역시 지난 5년간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 2022 칸 라이언즈

## LIONS

One moment can change everything.

접수기간: 2022년 1월 20일 ~ 4월 14일  
 접수방법: www.canneslions.com 홈페이지 접수  
 접수비용: 출품 부문별 상이  
 어워드 발표: 2022년 6월 20일~24일  
 ※출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칸라이언즈 출품안내문 참조

### 출품 접수 시작합니다